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하여

을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담뱃갑을 인상할 당시 국민 건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정작 인상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폼수 증세'였던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했다면 담뱃갑을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아예 담배 생산을 금지했어야 했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만 해도 그렇다. 담배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공공의 적이라면, 끔찍하고 흉측한 경고 그림을 넣어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일 것이 아니라 담배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전 원자력병원 원장 박재갑 교수는 담배를 '독극물'로 단정하고 이런 독극물의 판매를 허용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담배가 마약보다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담배 중독에 빠뜨려 놓고 그걸 통해 한 해 7조 원의 세금 수입을 올리는 지금의 상황은 마약 장사로 폐돈을 버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짓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독극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야단스럽게 흡연 규제를 하면서도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박 고수의 말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 즐비한데 유독 담배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하나의 예로 탄산음료를 비롯한 정크푸드를 들 수 있다. 2013년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한 해에 18만 명이 탄산음료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학계에 보고된 정크푸드의 피해는 심장마비와 치매 위험 증가, 면역 체계의 변화, 우울증 유발, DAN 손상, 아이큐 하락, 조산율 증가, 당뇨병 발병 위험, 비만 등 수없이 많다.

이 중에서 정크푸드에 함유된 설탕으로 인한 비만 문제가 심각하여 2017년 9월 후주의 보건단체연합회는 '비만이 흡연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정크푸드는 중독성도 심해서 정크푸드를 끊으려 했을 때의 금단 현상은 담배나 마약을 끊으려 했을 때의 증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 런던에서는 2019년 2월부터 모든 지하철과 버스에서 햄버거·탄산음료 같은 정크푸드의 광고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토록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정부 당국은 콜라나 사이다 병에도 흉측한 그림을 그려 넣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국민이 담배를 조금 덜 피우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완전히 금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가 밝혀야 한다. 만일 국민 모두가 금연하여 건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려면, 경고 그림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더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 넣는 '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을 마약범처럼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술병에도 담뱃갑처럼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인간의 오랜 벗인 담배와 술과 맺어 온 우정에 금이 갈 것이 틀림없다. 또 그만큼 우리네 삶도 파락해질 것이다.

기고



박성열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TK 사람들의 후회, 호남의 나아갈 길

구·경북의 토박이 TK들은 출향 인사들의 출세 소식에 괜시리 헛배만 부를 뿐,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정작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뒷걸음질 친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 통계(2018년)를 보면 1인당 GRDP(연간 생산액)의 경우, 대구(2018만 원), 경북(3699만 원)은 광주(2256만 원), 전남(3810만 원) 보다 떨어졌다(전국 평균 3204만 원). 청년 실업률은 광주(8.5%), 전남(8.4%)에 비해 대구(11.9%), 경북(10.8%)이 높으며 전국 평균(9.4%)을 상회한다. 주관적 소득 만족도는 전국 평균이 13.3%인데 광주(15.2%), 전남(15.7%)보다 대구(10.7%), 경북(12.7%)이 상당히 낮다. 대구·경북에 계속살아온 TK 사람들의 불만과 푸념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호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까? 최근 특정 시사주간지가 특집(2018년

12월)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 지역 분포를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교해 게재한 내용을 보면 TK 인사는 2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호남은 13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호남 출신들은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정권의 핵심 자리를 맡고 있고 공무원들도 중앙 부처에서 예전에는 가기 힘들었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출신 인사 중용은 그간의 호남사람들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용된 지역 출신 인사들을 통해 지역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 해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TK지역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에서 보듯 중앙 무대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 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호남 지역이 잘 살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래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광주·전남의 핵심 사업을 독심 있게 추진해서 지역의 생산성과 고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치가 강조되는 거버넌스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들은 가능한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나가는 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호남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호남은 이제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 주도 세력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의 길을 호남이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고



박병희  
순천대 경제회계학부 교수

재정 분권과 재정 균형

제를 지방의 소도시까지 똑같이 시행하게 해도 균발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온 행태였다. 수도권은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만, 지방 소도시에 살면 막히는 일 없이 차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외곽, 이렇게 홍보하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라면 가치 판단도 않고 받아들여 왔다. 도대체 자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봐야 한다. 지방 자치가 과연 필요한가? 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방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방이 더 잘 안다는 것이다. 전국의 시군에 일률적으로 도서관을 하나씩 짓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먼저 짓든, 체육관을 먼저 짓든 그 지방에서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지방 자치이다. 소위 지방 주민들의 공공재 수요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 자치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돈이 많이 든

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랴 돈이 더 든 것이라면, 오히려 이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지방 자치가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잘 어울린다.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재정면에서의 분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의 중간인 조세 수입 비율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로 불균형이 크다.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는 지방에 지방 교부세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은 중앙에 예측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종속 관계가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 자치가 실현되기 어렵다.

지방 재정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국제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는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 면에서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세원이 많아서 지방세를 많이 걷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경제력이 약해서 어차피 조세 수입이 별로 없는 자치단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간 조세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가난한 자치단체들은 재원 부족으로 공무원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필자가 작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대신 지방 교부세를 줄인다면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 등은 재정 수입이 증가하지만 비수도권의 도 지역은 재정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은 2015년 기준으로 1조 원 가까이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지방세 확충의 영향은 각 지방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오히려 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재정 분권도 필요하지만, 재정면에서의 지역간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社說

‘재판 도중 음독’ 보안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최근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음독을 시도하면서 법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울산지법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 강화를 주문했지만 다시금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것چه 광주지법의 한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는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는데 1심에서 징역 7년 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소형 제초제병을 꺼내 들이켰다고 한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출석한 그는 두꺼운 장퍼 안에 플라스틱병을 감춘 채 법원의 검문검색을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울산지법 법정에서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60) 씨가 옷에 지니고 있던 농약을, 2015년에는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C(56) 씨가 제초제를 마시는 등 법정 음독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피고인들이 재판에 앞서 준비한 독극물을 법정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술한 보안 검색은 자칫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테러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총기·총기·폭발물 또는 위험물 등은 반입을 금지하거나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광주지법은 이 규정에 따라 출입구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소지품을 검색하고 신체 검색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지만 구속 상태나 주요 사건 피고인이 아닌 이상 직접 옷을 벗게 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한 전면 검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체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검색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보안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김용균법’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라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가 있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이날 국회를 찾아 간절히 호소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불발된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번번이 해당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파견 용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치권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 7개 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2년 동안 국회에서 방치됐다. 재계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 법안’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삭제하고 위험 작업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완화한 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당시 산안법이 통과됐던 김 씨의 죽음만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회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함에도 또다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알 수 없다.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저항하는 재계도 문제지만 야당은 언제까지 그들의 눈치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약한 노동자들을 죽음 앞으로 내모는 일이 더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여야는 모레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그 대상이 국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런 일이 최근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다.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이 옳다”며 고개를 떨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게재한 공개 답변에서 유류세 인상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한 100만 명을 향해 “당신들의 메시지, 나는 그것을 들었다. 나는 당신들에게 직접 대답하고 있다, 당신들이 옳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젊고 험기방장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국민 사과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 폭력사태로 번지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사과를 검토하지 않았었다. 직설적이며 자신만만한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계획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은퇴자 사회보장제 인상 철회 등을 발표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노란 조끼를 꺼내입은 시민들은 아직까지 분노를 거두들이지 않고 있고, 마크롱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외국의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될 것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일명 ‘소수장’이라고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일부에서는 감지되는 상태다. 위기의식까지는 아닐 지라도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조치는 정도만 다를 뿐 마크롱 대통령의 ‘당신이 옳다’라는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가계를 돌보는 것이 정치라면, 국민이 불만을 느끼는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燦</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령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